

“생산농가 자유로운 판로허용 책임지고 쟁길것”

정강정 조정관 「규제개혁성과 및 향후과제」 토론회서 밝혀

한약재 품질관리 및 유통 구조와 관련한 규제개혁은 가공 및 유통분야의 생산성 저해요인이 대폭 해소되었으나 규제개혁 내용이 지자체 실무자들에게까지 충분히 파급되지 못해 체감도가 낮고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한약재의 특성상 여러부처간의 중복규제 및 덩어리 규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림부의 의지만으로는 규제개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의 이동필 연구위원은 지난달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농림어업분야 규제개혁 성과 및 향후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본회 남정학 전무는 “국산한약재 중 독우려가 없는 품목은 생산농민이 규격기준에 맞춰 생산, 한방의료기관에 직접 유통을 허용한다는 것이 규제개혁 방침인데 복지부에서는 농민들의 자가 규격포도 의약품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인 만큼 자가 규격 허용품목 설정과 사후관리제도 마련 과정에서 오히려 생산농가의 자가규격 허용범위가 축소되거나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며 “규제개혁위에서 농가부가가치 실현과 국내생약농업 육성차원에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생산농가의 자유로운 판로보장

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강정 규제개혁위원회 조정관은 “제조업에서만 한약재를 수입,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건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엄청난 규제”라고 지적하고 “생산농민들의 부가가치 창출 차원에서라도 생산농가의 자유로운 판로허용 부분은 책임지고 확실히 쟁길 것”임을 약속했다.

〈본회 남정학 전무 토론회 발표요지〉

지난해(99.8.27일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한약재 관련 규제개혁내용은 생산농민들에게도 자가규격 포장 판매를 일정부분 허용함으로써 그동안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생산농민들과 약업계에도 상당히 큰 힘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규제개혁방안에 따르는 구체적 결과물이 아직 없어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약재 음·식료품 원료사용 규제개선과 관련

한약재 중 오래전부터 차나 술로 이용해 온 복분자, 음양곽 등의 식품원료 사용에 대해 규제완화 방침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품목 고시가 아직 안된 상태다.



한약재 규격화제도 개선과 관련

국산한약재 중 독우려가 없는 품목은 생산농민이 규격기준에 맞춰 생산 한방의료기관에 직접 유통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해당부처에서는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다. 당초 동 규제안이 대두된 것은 69개 품목 한약재를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제함으로써 생산농민들의 자가규격품 생산과 직거래를 제한하는 불합리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중독우려 없는 품목설정이 과제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제조업소에서는 514개 한약재 모두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 반면 생산농민의 자가규격화 허용 부분에 대해서는 중독우려가 없는 품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더구나 복지부에서는 농민들의

자가규격포도 어디까지나 의약품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품목설정과 사후관리제도 마련 과정에서 당초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생산농민들의 자가규격 허용 범위가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규제개혁내용 지자체에 정확히 전달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농가부가가치 실현과 생산농민들의 자유로운 판로허용 부분에 대해 끝까지 관심을 갖고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또하나는 앞서 발표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에게 까지 이같은 규제개혁 내용이 효과적으로 파급돼 있지 않은 관계로 생산농민들의 국산한약재 자가규격포장 판매 행위가 단속대상이 돼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개혁방안에 대한 구체적 사후지침이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명확히 전달돼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제도폐지 중심의 규제개혁에서 필요하다면 규제신설까지 포함하는 규제정비 개념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도적 차원의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

식품용한약재 반입 추천권 이양

한약재수급조절제도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약재로는 수입이 제한돼 있는 수급조절품목들이 식품으로 대량반입돼와 생산농가 피해가 심각하다. 더구나 현행 26개 수급조절품목 조차도 단계적 개방 방침이어서 지금 산지에서는 종자를 무상으로 공급해도 한약재 농사를 지으려는 농민이 없을 정도로 국내 생약생산 기반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보호품목에 한해서는 식품용으로도 반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식품용 반입 추천권을 농림부에서 관장하거나 생산자 단체에 부여해서 국내 한약재 시장의 수급조절기능을 활성화하고 하한가 계약재배 등 국내 생약생산 기반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절실하다.

계획생산에 의한 하한가 계약재배 정책 수립 필요

갈수록 붕괴돼가는 국내 한약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국산생약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농림부 차원에서 대단위 생약단지 조성 및 계획생산에 의한 하한가 계약재배 정책 등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우리생약 살리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우리감초 1호」 증근 공급안내

- 종자업 등록번호: 제11-1999-70-01호
- 품종명칭 등록번호: 신고 99-8395

“
식품원료용 수입약재의 무분별한 반입으로 국내 생약농업은 갈수록 황폐화 돼 가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이제는 우리도 재배 가능한 전량 수입의존 품목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

- 한의원, 한약방, 제약업, 식품업계에서 1년간 사용하는 감초는 무려 5,000톤이나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뿌리의 감초도 생산되지 않아 100%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본사에서는 중국의 내몽고고원산 홍피감초를 국내적응시험을 거쳐 “우리감초1호”라 이름지어 정부에 품종생산판매신고를 마치고 지난 한해동안 육묘한 증근을 재배희망농가에 공급코자 합니다.
- 그늘지지 않고 물빠짐이 좋은 모래참흙땅이면 어디든 재배가 가능합니다. 금년도 증근을 식재하여 1년만 재배하면 최소 300~500kg 정도 생산이 가능하며 수확물은 저희 회사에서 수매할 것입니다.

○ 증근 보유량이 한정되어 3월 25일까지 공급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300평당 8,000주 정도를 심을 경우 증근가격은 약100만원 정도(주당 130원)가 소요되나 1년 농사후 종묘를 자가생산할 수 있으므로 종묘대 부담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다른 발작물보다 소득면에서 높을 수 있습니다.

재배기술, 수매계약에 관해서는 신청농가와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전화주십시오.